

STX, 범양상선 M&A 우선협상자 예비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 선정

국내 해운업계 사상 최대의 매물인 범양상선 경영권이 STX(011810)로 넘어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최종 입찰참여업체 7곳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STX를 범양상선 인수합병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예비협상대상자로는 금호아시아나가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TX는 범양상선 채권단 보유 지분 중 67%를 인수할 예정이다. STX는 주당 인수가격으로 입찰참여업체 중 가장 높은 주당 2만2000원 가량을 써냈다. 총 인수대금은 4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STX는 9월14일께 주식매매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10%)을 납입하고 10월8일까지 상세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20일 주식매매대금 조정을 완료하면 10월29일 잔금 납입과 함께

주식이 양도되며 계약이 종결된다.

현재 산업은행 64.45%, 외환은행 10.42%, 우리은행 6.32%, 조흥은행 3.55% 등 채권단이 총 주식의 99.64%를 보유하고 있다. 박건석 전 회장의 투신자살,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지난 1987년부터 법정관리와 은행관리를 받아왔던 범양상선은 이로써 15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한편 범양상선은 해운업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1조9771억원, 영업이익 778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 6363억원, 영업이익 1123억원을 냈다. 57척의 자채 선박과 200여 척의 용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은 852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 '남북해운합의서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열차운행 합의서 등

남한과 북한 개성공업지구간의 자유로운 우편·전기통신 교류, 열차운행 및 선박운항 등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안', '남북해운합의서안' 등을 의결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남한과 개성공업지구간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를 민족 내부간 교류로 보고 제 3국을 경유하지 않은 채 직접 교환·연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해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토록 했다.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안에서는 남북을 오가는 열차의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실무적 문제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남북 대표 1명씩을 포함해 5~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남북해운합의서안을 통해 정부는 남북간 해상

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는 것과,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남한의 인천·부산 등 7개 항과 북한의 남포 원산 등 7개 항간 항로를 개설하도록 했다. 특히 양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긴급재난 피난보장과 해양사고시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KSF선박금융 14억7천만원 유상증자 수출입은행 12억7천만원, 삼성생명 2억원

'아시아퍼시픽1호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인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KSF선박금융)이 8월26일 수출입은행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각각 12억 7000만원(지분율 15.0%)과 2억원(지분율 2.4%)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번 증자로 KSF선박금융의 자본금은 종전 70억원에서 84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오는 9월에는 삼성중공업 등이 주식양도방식으로 출자할 예정이다.

KSF선박금융은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이를 국내 해운회사에 용선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투자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수출입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가세로 초기 단계에 있는 선박투자회사제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도가 향상돼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거액의 시중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유입되는 효과와 함께 국내 해운사가 자기자금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국제선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아시아퍼시픽1호를 인가받아 운용중인 KSF선박금융은 오는 9월 초에 삼성증권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모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해양부가 지난 2002년 5월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동북아 선박펀드가 5개, 아시아퍼시픽선박펀드가 1개 등 총 6개의 선박펀드를 인가됐다.

한편 선박투자회사제도는 해운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돼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노르웨이는 등록선박의 61%, 독일은 75%가 선박펀드제도를 통해 건조되고 있다.

한·중 해상안전 협력체제 강화키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책임자급으로 확대 제5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 중국에서 개최

한·중 양국은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중국 중경(충칭)에서 제5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해상안전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제도를 PSC 책임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시행과 관련하여 항행시간이 짧은(12-25시간) 한-중간 정기여객선의 경우, 선박보안정보를 매 항차마다 입항 24시간 전에 보고하는 대신에 1-2주 등 일정기간으로 일괄보고하기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리측에서 해양수산부 김덕일 안전관리관을 대표로 하여 7명이, 중국측에서 해사국 유공신 상무부국장을 대표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항만국통제(PSC)를 비롯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시행방안,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해사·안전 담당 중견공무원의 정부기관간 상호 파견근무,

한-중간 운항 정기여객선(12척)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항만국통제(PSC) 실시에 관한 사항과 관련, 양국은 해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로 상대국 선박에 대한 PSC 출항정지율이 급감하였음에 상호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이러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악용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PSC를 엄격히 실시하여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항정지 조치 전에 상대국에 통보·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시행에 대해서는 항행시간이 짧은 한-중간 정기여객선의 경우, 항차마다 입항 24시간 전에 보고하는 대신에 1-2주 등 일정기간을 모아 일괄보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추후 실무협의 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해사·안전 담당 중견공무원의 정부기관간 상호 파견근무

에 대해 양국은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중국측은 그 범위를 PSC 책임자급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여 우리측이 이를 수용했다. 구체적인 대상 항만,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실무협의 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사·안전 관련 중견공무원을 상대국 정부의 해사당국에 파견근무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은 금년부터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업무는 양국간 해사·안전정책 연구와 관련 협력사업 조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으로 정하고, 기간은 2년이상으로 잠정합의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한-중간 운항 정기여객선(12척)의 안전확보를 위해 양국 등록선박(4척)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6개월 주기로 상대방 국가에서 PSC 실시하고, 파나마 등록선박(8척)에 대해서는 3개월 주기로 양국이 PSC를 교대로 실시기로 했

다. 선령 20년 초과 노령선박에 대해서는 상세한 PSC를 실시하고 여객의 인화물질 휴대승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양국간 해상안전 협력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선박보안정보 보고제도 개선내용을 소속기관 및 업계에 전파하고 정기여객선에 대한 PSC 실기주기 합의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중에 양국간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실무협의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관련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중 해상안전협의회 차기회의는 2005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지 간담회 개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우선정책

9월부터 연말까지 고객과 쌍방향 대화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해양오염방지업무 고객과의 쌍방향대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고객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둔 해양오염관리행정을 펴왔으나 국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순차적으로 해양오염방지구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일정에 따라 9월8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서울지역 해운업계 방제담당자들과 고객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해양오염방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북돋움으로써 자발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담회는 본청주관 4회, 해경 주관이 32회로서 해운업체, 해양시설, 방제 청소업,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4개분야로 나뉘어 개최되며 첫 간담회는 9월3일 부산지역 해운업체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부산 중앙동 소재 해기사협회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중인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검사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이중점검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앞으로 국적선과 해양시설업체에 대한 정기점검도 서류심사에 의한 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지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관련업체와의 부담없는 대화를 통하여 고객(기관이용자)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혁신정부의 참모습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항만보안전문가 미국항만 시찰 양국 항만보안 협력강화 교역활성화 기여

해양수산부, 관세청,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의 항만보안 전문가 5명이 9월9일부터 2주간 미국 항만시설을 견학하고 양국간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방문단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미국 롱비치항과 시애틀항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보안태세 및 ISPS Code 이행 정도, 각종 보안관련 시설



의 구비, 항만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순찰·감시, 화물의 검색 현황 등 전반적인 항만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시찰할 예

정이다.

또 향후 한·미간 긴밀한 항만보안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보안시설 및 시스템의 문제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방문은 한미간 협력차원에서 상호 항만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지난 7월말 미국 항만보안팀이 우리나라 항만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미국 항만보안팀은 우리나라 5개 주요 항만을 방문한 결과 우리의 항만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해양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간 항만보안에 관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경우 우리 항만 기항 선박의 미국 입항시 신뢰성이 제고돼 보안절차와 점검이 다소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미 해상교역 활성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선박을 우리 항만으로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선원법-ILO 선원신분증명서협약 수용위해

선박직원법-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

해양수산부는 8월18일 선원법개정법률안을, 19일에는 선박직원법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선원법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함께 쟁의행위 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선원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선원법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를 보면, 선원 및 선원근로계약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원신분증명서 및 선원수첩의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안 제3조).

또 선원은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별도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정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안 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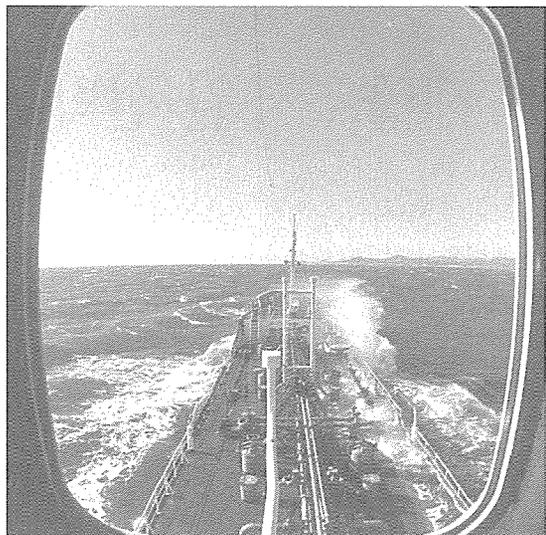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안 제42조의3)하도록 했으며, 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이밖에도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외항은 6일, 내항은 5일로 1일씩 늘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안 제68조)했으며,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선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의 편의를 도모(안 제79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선박직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협약에 따라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파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사1급과 기사2급을 통신기사 및 산업기사로 개명한 것을 반영(안 제8조 제1항)했다.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 도입키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효율적 관리위해

병무청(청장 김두성)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지정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병역지정업체는 90년대에는 11,000여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19,397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이후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다소 줄어 현재 전국의 17,000여개 지정업체에 78,000여명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당초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2005년도부터 인력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관련 부처들의 지속적 인력지원 요청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의하여 정부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당정 협의 끝에 2002년까지 금년 수준의(7,000명) 인

력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한 지정업체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우수업체 위주의 인력지원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정업체 평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활용하여 매년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사항 등 4개 분야를 평가한 점수와 년중 발생하는 복무관리 우수 및 부실사례 등 가·감점 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20%), 중(50%), 하(30%)의 3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상등급으로 평가된 우수업체는 다음연도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인원배정시 우대하는 반면 하등급으로 평가된 부실업체는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지정업체에서 퇴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원 선박위치확인 천측력간행

국립해양조사원은 최신 자료를 수집해 기존의 천측력을 수정·보완한 2005년도 천측력을 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간행된 천측력은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항해장비인 육분의(Sextant)를 사용해 해, 달, 행성, 항성 등의 천체를 관측, 방위와 고도를 구하고 천측력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위도, 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전자항해장비의 발달로 선박이 대양을 항해할 때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자동항법으로 항해하고 있다.

이 책자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nori.go.kr>)와 전국 수로도서지판매소(02-701-9981)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권당 1만 2000원이다.